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

노창희 연구위원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2022. 3. 23.

목차

1. 문제 제기
2. 現 미디어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3. 연구방법
4. 전문가 조사 결과
5. 시사점 및 제언

1. 문제 제기

2. 現 미디어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3. 연구방법

4. 전문가 조사 결과

5. 시사점 및 제언

1. 문제제기

방송 콘텐츠 진흥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의 진흥과 미디어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 재정립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검토 필요

디지털 대전환과 미디어 환경 변화

- 디지털 대전환 이행 중에 발생한 코로나는 미디어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OTT 주도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
- OTT와 같은 플랫폼 주도로 미디어 뿐 아니라 전 산업이 재편되어 감에 따라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되어 가면서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이 와 중에 K-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미디어산업 진흥 필요성 증대

- 코로나로 인해 일과 여가에 있어 미디어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미디어산업 진흥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국내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는 미디어 산업의 효율적인 진흥을 도모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해 미디어 산업과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조직 개편 필요

- 다원화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로 인해 효율적인 산업 진흥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부처 간 업무 중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미디어 거버넌스가 개편된다고 할지라도 부처 간 역할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조직 개편 뿐 아니라 부처간 협력 및 업무 조정에 대한 고민 필요

1. 문제제기

2. 現 미디어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3. 연구방법

4. 전문가 조사 결과

5. 시사점 및 제언

2. 現 미디어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미디어 관련 기구 주요 업무

- 미디어 관련 정책이 좁게 봐도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 공정위 등 4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진흥 정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
-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OTT, 플랫폼 정책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구조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미디어 관련 기구 주요 업무 >

부처	주요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홈쇼핑 ·인허가, 통신 ·인허가, 전파 관리, 디지털 미디어 진흥, 인공지능, 데이터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종편 ·인허가, 방송편성/다양성, 방송광고, 방송/통신 사후규제, 인터넷/플랫폼 정책, 외주제작, 이용자보호/단말기 유통조사, 디지털 유해 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 광고 진흥, 영상물 심의, 한류 지원, 저작권 관리, 게임, 독립제작사 지원, 출판
공정거래위원회	유료방송 M&A, 방송/통신 사후규제, 플랫폼 정책, OTT M&A

2. 現 미디어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미디어 거버넌스 관련 각 당 입장

-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 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모두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공약 발표
- 양 당 모두 분산된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약 및 정책자료집을 통해 발표했으며, 특히 콘텐츠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국민의힘 거버넌스 관련 공약*	더불어민주당 거버넌스 관련 공약**
■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u>현 정부의 미디어 분야와 관련된 산업적인 정책기조 불명확</u> - <u>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법제 필요</u> - <u>미디어를 언론으로 국한시켜 규제 대상으로 한정</u> ■ 미디어산업 진흥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하여 중복 규제 및 비효율적인 규제체계의 문제 극복	■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정책을 통합하는 전담부처 신설 추진 ■ 콘텐츠 및 미디어 정책 통합 전담부처 신설 - <u>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를 통합 담당할 '(가칭)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미디어부)' 신설</u> - <u>미디어 정책 일원화, 전문화로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u> - <u>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원 육성</u> - <u>미디어시장 격변에 대응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미디어 정책 수립, 집행</u> ■ 방송미디어 규제감독 전담 독립기구 위상 강화 - <u>통합부처와 별도로 기존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방송미디어 규제 감독 전담 합의제 독립 국가기구로 격상</u>

* 국민의힘(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ICT 정책 공청회 자료집>.

**더불어민주당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특별위원회 (2022. 2. 22). <새정부 미디어 정책 과제와 방향>을 인용하고 정리

2. 現 미디어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現 미디어 거버넌스의 문제점

- 미디어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업무의 중첩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중복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 OTT 활성화,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통합법 체계 마련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법체계 마련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주요 이슈	세부 내용
부처 간 업무 중복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 공정위 등의 업무가 중복되어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사업자들은 중복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효율적이지 않은 거버넌스 구조	미디어 관련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한계가 존재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에 한계	OTT 활성화, 디지털 대전환 등에 부합하는 미디어 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하나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로 인해 법체계 개편이 어려운 상황
부처간 협력 체계 미흡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가 많지만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움
이용자 복지 구현 미흡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분산되어 있는 거버넌스가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이용자 복지 정책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

출처: 김수원·김성철(2017); 김희경(2022); 성동규(2021); 정용남(2017);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2017)을 기반으로 정리

2. 現 미디어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現 미디어 거버넌스의 구조로 인한 부작용

- OTT와 플랫폼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나 부처간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관할권을 두고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700MHz 주파수 배분, 콘텐츠 대가 관련 갈등, 유료방송 M&A 등에서 거버넌스 구조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난 바 있음

이슈 및 사례	세부 내용
OTT 관련 규제 관할권	OTT와 관련하여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가 모두 관련되어 있어 규제 관할권을 두고 대립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플랫폼 정책 규제 관할권	플랫폼 정책과 관련하여 과기부, 방통위, 공정위가 모두 관련되어 있어 규제 관할권을 두고 대립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700MHz 주파수 배분	당시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 주파수와 관련된 입장이 달랐고 소관 영역이 달라 주파수 분배와 관련된 논의의 혼선이 초래되었음
콘텐츠 대가 관련 갈등	지상파 재송신 때부터 과기부, 방통위 양 부처가 관련되어 분쟁의 효율적 조정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으며, 콘텐츠 대가와 관련해서 비슷한 양상 나타남
유료방송 M&A	SK-CJ헬로비전 M&A가 공정위 불허로 끝나 미디어 관련 전문 규제기관으로 넘어 오지 못하는 등의 문제 발생

2. 現 미디어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거버넌스 개편 원칙

- 미디어의 기본적 가치인 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디어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 필요
- OTT 활성화, 디지털 대전환 등 현재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가장 큰 장점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한 거버넌스 개편 필요

거버넌스 개편 원칙	세부 내용
미디어 관련 부처 일원화	미디어 관련 부처를 일원화하여 미디어 산업을 진흥하고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
미디어 산업 진흥	미디어를 언론으로 등치 시키는 접근을 지양하고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는 최소 개입을 원칙으로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필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방송영상콘텐츠 규제·진흥정책 일원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적 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 육성 필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OTT 활성화, 디지털 대전환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 개편 필요
이용자 복지 증진	이용자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 재정립

출처: 성동규(2021); 천혜선(2022);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2017) 기반으로 재정리

1. 문제제기

2. 現 미디어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3. 연구방법

4. 전문가 조사 결과

5. 시사점 및 제언

3. 연구방법

전문가 조사

- 본 연구에서는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방향 제시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였음
- 전문가 조사는 서면조사로 실시 되었으며, 교수, 연구 전문기관, 로펌에 소속 되어 있는 변호사 혹은 전문위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음
- 조사 대상은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요청하여 총 32명에게 답변을 받았으며 의견 주신 전문가는 아래와 같음
 - ✓ 방송콘텐츠 전문가 10명, 문화 콘텐츠 전문가 4명, 유료방송 플랫폼 전문가 5명, 지역방송 전문가 2명, 외주제작 전문가 1명, 법 전문가 4명, 공영방송 전문가 4명, 시민단체 활동가 1명
- 조사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음
- 조사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 ✓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형태
 - ✓ 각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형태별 콘텐츠 조직 구성

1. 문제제기

2. 現 미디어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3. 연구방법

4. 전문가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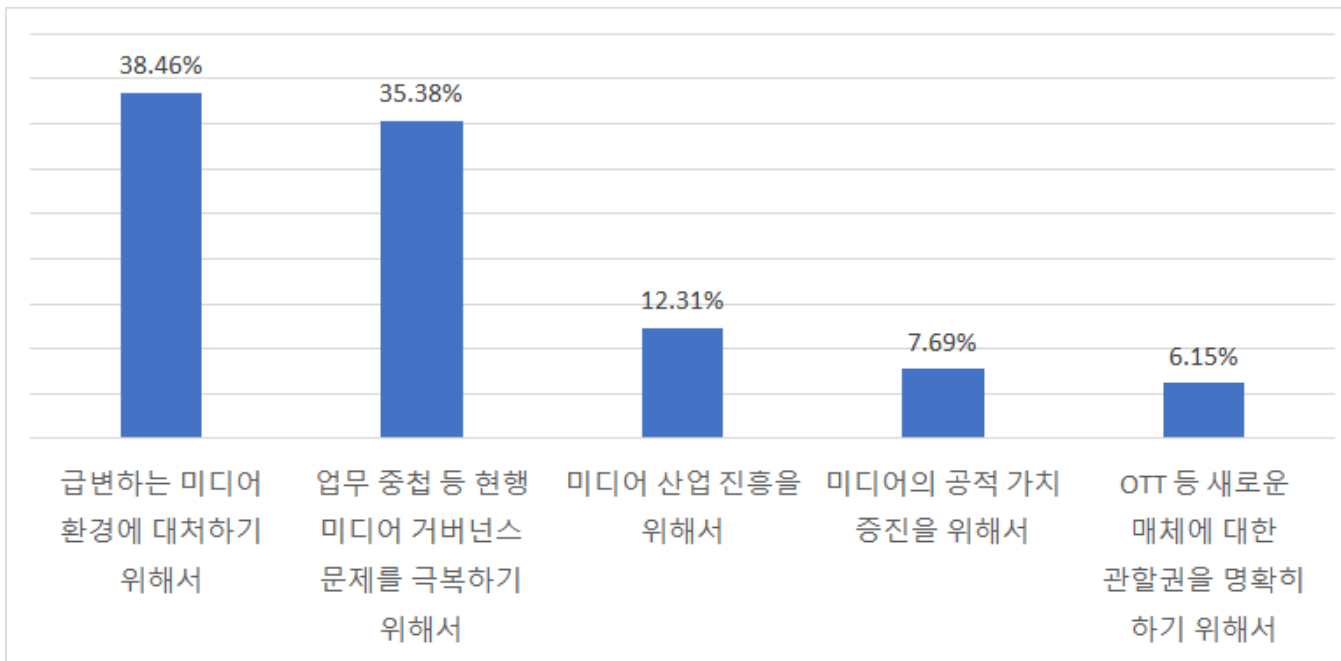
5. 시사점 및 제언

4. 전문가 조사 결과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 많은 전문가들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38.46%)"와 "업무 중첩 등 현행 미디어 거버넌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35.38%)"를 선택

<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



미디어 환경에 대응

- 미디어 기술 변화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 필요

부처 간 업무 중복 부작용 해소

- 현재의 업무 중첩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필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산업 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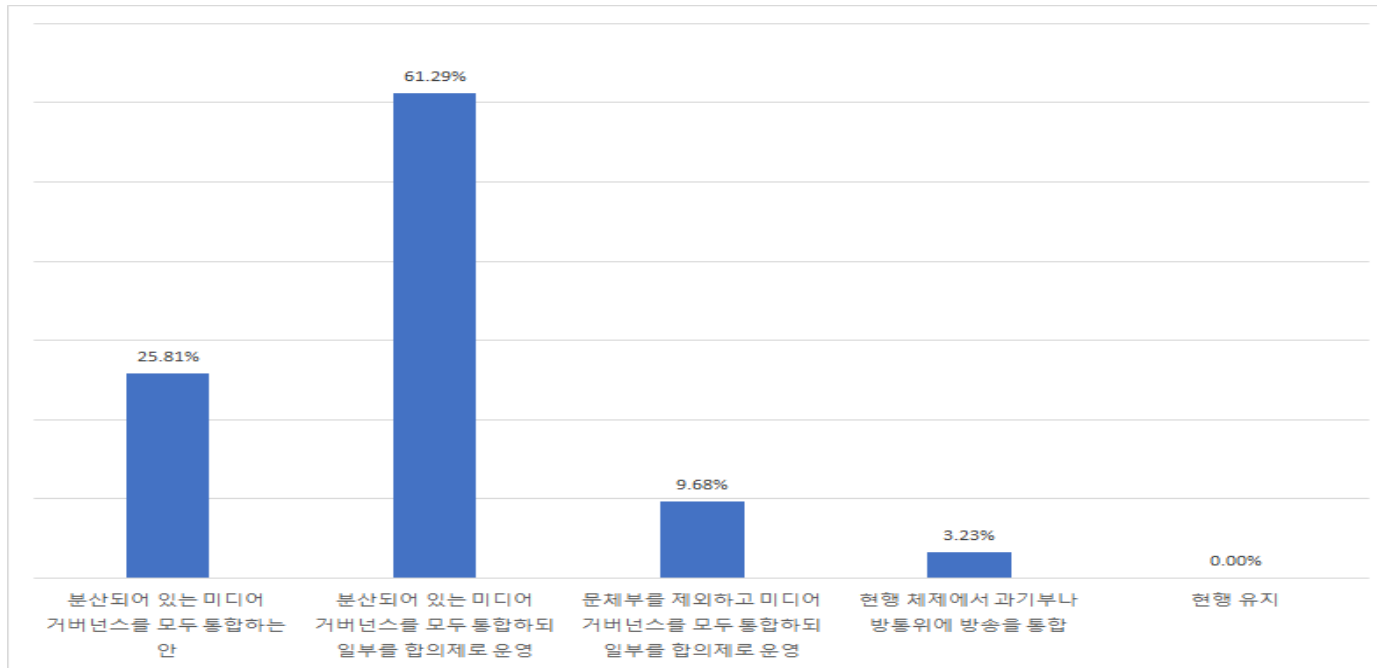
-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미디어 산업 진흥 필요성 증대

4. 전문가 조사 결과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형태

-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되 일부를 합의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압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거버넌스로 선택했으며(61.29%), "모두 통합하는 안"을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25.81%)

<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형태 >



진흥 중심으로 부처 일원화 필요

- 진흥 중심으로 부처를 일원화 하여 단일 체제 내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그를 통해 진흥 유도

분산된 거버넌스의 한계 극복

- 부처를 일원화하여 중복규제 등 현재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극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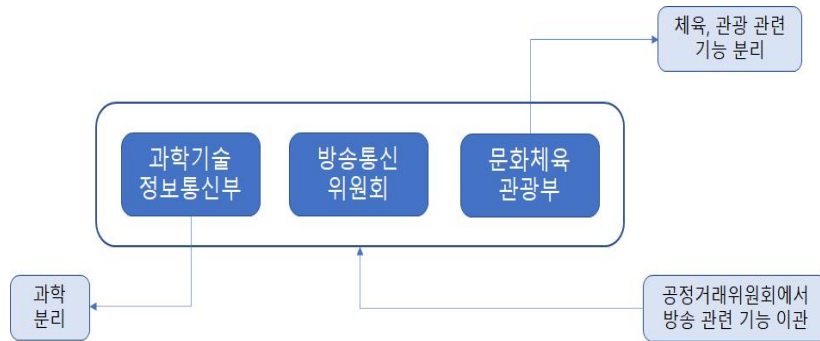
합의제의 특수성 인정 필요

- 언론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합의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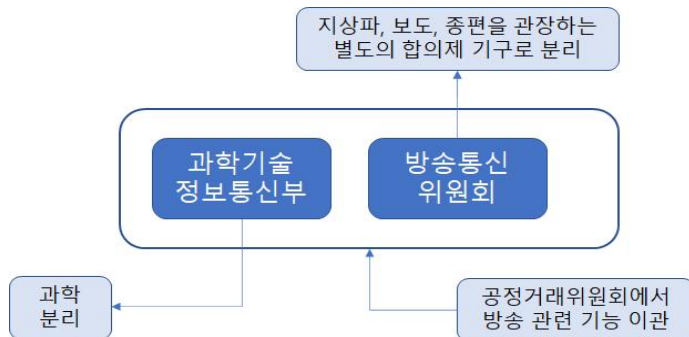
4. 전문가 조사 결과

거버넌스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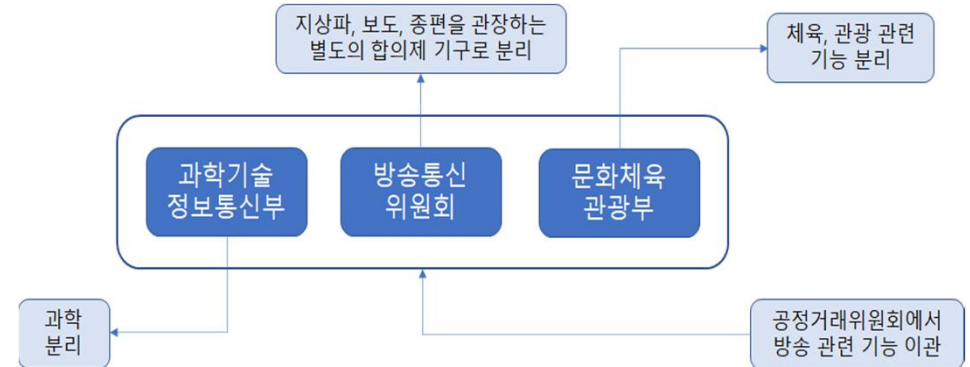
(1안)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는 안



(3안) 문체부를 제외하고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되 일부를 합의제로 운영



(2안)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되 일부를 합의제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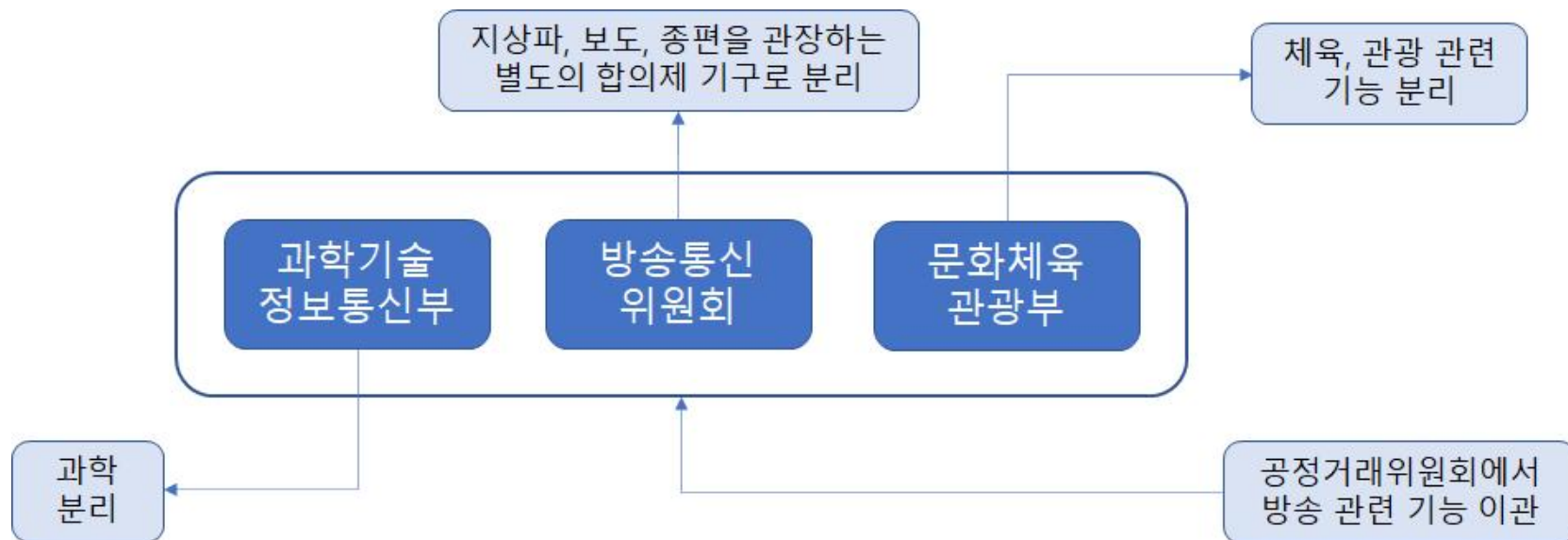
(4안) 현행 체제에서 과기부나 방통위에 방송을 통합

(5안) 현행 유지

4. 전문가 조사 결과

다수안(2안) :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되 일부를 합의제로 운영

- 진흥 중심의 대부처를 만들고 독임제로 운영하되, 지상파, 보도, 종편 등 보도를 수행하는 방송사를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를 두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61.29%)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되 언론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도를 수행하는 방송사를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 마련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안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4. 전문가 조사 결과

‘다수안(2안)’에서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 형태

- “실 단위로 콘텐츠 조직을 만들고, 방송, 외주제작, 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 모든 콘텐츠 관련 분야를 콘텐츠 관련실에서 관장(71.43%)”이 “방송 관련 국을 만들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과 단위로 재편(28.57%)”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응답
 -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별도로 방송정책국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도 일부 있었음

콘텐츠진흥실

1안

디지털콘텐츠국	방송콘텐츠국	미디어정책국
- 콘텐츠진흥기획과 - 문화산업정책과 - 영상콘텐츠산업과 - 게임콘텐츠산업과 - 대중문화산업과 - 한류지원협력과	- 방송콘텐츠진흥과 - 방송채널진흥과 - 홈쇼핑정책과 - 방송광고정책과 - 편성평가정책과 - 디지털방송정책과	- 미디어정책과 - 방송영상광고과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저작권정책과 - 저작권산업과 - 저작권보호과 - 문화통상협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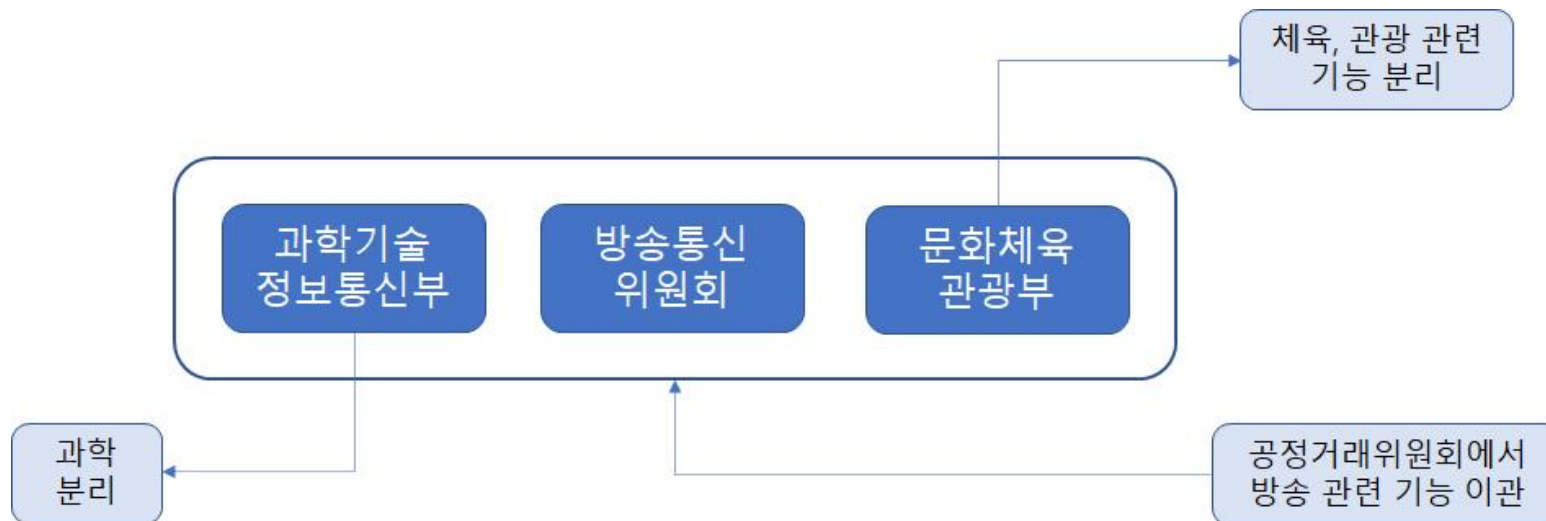
2안

방송정책국	- 방송정책기획과 - 방송채널진흥과 - 홈쇼핑정책과 - 방송광고정책과 - 편성평가정책과 - 디지털방송정책과
-------	--

4. 전문가 조사 결과

소수안(1안):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는 안

- 독임제를 전제로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 등 미디어 관련 부처를 모두 통합하되, 과기부에서 과학을 별도로 분리하고, 공정위에서 유료방송 M&A 등 미디어 관련 기능을 새로운 통합 부처로 이관(25.81%)
 - 부처 간 갈등을 지양하고 독임제 기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안을 선택



4. 전문가 조사 결과

'소수안(1안)'에서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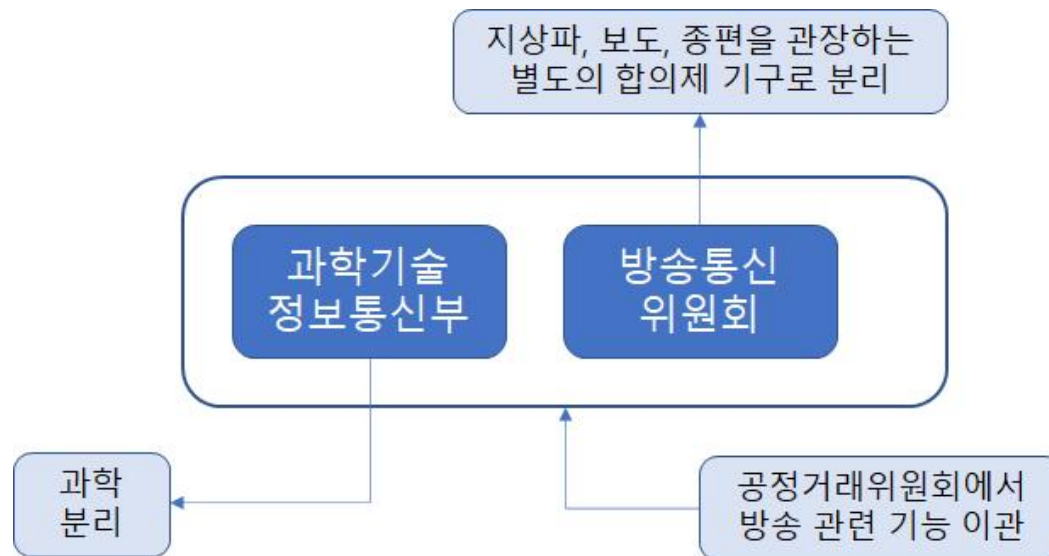
- "실 단위로 콘텐츠 조직을 만들고, 방송, 외주제작, 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 모든 콘텐츠 관련 분야를 콘텐츠 관련 실에서 관장하고 지상파, PP 등은 과 단위로 재편(81.82%)"이 "방송 관련 국을 만들고 지상파, PP 등은 과 단위로 재편(18.18%)"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응답
 -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며, 동일 콘텐츠-동일 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 실 단위의 콘텐츠 조직 하에 다른 유통경로별로 세부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응답

콘텐츠진흥실				
1안	디지털콘텐츠국	방송콘텐츠국	미디어정책국	2안
	- 콘텐츠진흥기획과 - 문화산업정책과 - 영상콘텐츠산업과 - 게임콘텐츠산업과 - 대중문화산업과 - 한류지원협력과	- 방송콘텐츠진흥과 - 지상파방송정책과 - 종편보도정책과 - 방송채널진흥과 - 홈쇼핑정책과 - 방송광고정책과 - 편성평가정책과 - 디지털방송정책과	- 미디어정책과 - 방송영상광고과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저작권정책과 - 저작권산업과 - 저작권보호과 - 문화통상협력과	
			방송정책국	- 방송정책기획과 - 지상파방송정책과 - 방송채널진흥과 - 홈쇼핑정책과 - 종편보도정책과 - 방송광고정책과 - 편성평가정책과 - 디지털방송정책과

4. 전문가 조사 결과

소수안(3안): 문체부를 제외하고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되 일부를 합의제로 운영

- 독임제를 전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합하되, 과기부에서 과학을 별도로 분리하고 지상파, 보도, 종편 방송사를 관장하는 합의제 기구를 두는 방향으로 조직개편(9.68%)
 -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문체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기부와 방통위 중심의 통합을 추진하되 문체부의 업무는 고유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4. 전문가 조사 결과

'소수안(3안)'에서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 형태

- "실 단위로 콘텐츠 조직을 만들고, 방송, 디지털 콘텐츠 등 모든 콘텐츠 관련 분야를 콘텐츠 관련 실에서 관장 (76.19%)"이 "방송 관련 국을 만들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과 단위로 재편(23.81%)"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응답
 - 콘텐츠 산업 진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단위의 조직에서 콘텐츠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일부 전문가는 과기부-방통위의 통합만 이뤄진다면 2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

콘텐츠진흥실

1안

디지털콘텐츠국	방송콘텐츠국
- 디지털콘텐츠진흥기획과 - 콘텐츠산업정책과 - 영상콘텐츠산업과	- 방송콘텐츠진흥기획과 - 방송채널진흥과 - 홈쇼핑정책과 - 방송광고정책과 - 편성평가정책과 - 디지털방송정책과

2안

방송정책국	- 방송정책기획과 - 방송채널진흥과 - 홈쇼핑정책과 - 방송광고정책과 - 편성평가정책과 - 디지털방송정책과
-------	--

4. 전문가 조사 결과

'소수안(4안)'에서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 형태

- "현행 체제에서 과기부나 방통위에 방송을 통합(3.23%)"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조직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음
 -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 형태로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포함한 방송실을 만들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과 단위로 재편하는 것(81.25%)"을 "현재와 같은 체제(18.75%)"를 유지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진흥을 위해서는 별도의 과가 필요

1안

방송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방송정책국	방송기반국
· 방송진흥기획과 · 뉴미디어정책과 · 디지털방송정책과	· 방송정책기획과 · 지상파방송정책과 · 방송채널진흥과 · 홈쇼핑정책과 · 종편보도정책과 · 방송지원정책과 · 지역미디어정책과	· 방송기반총괄과 · 방송광고정책과 · 편성평가정책과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방송시장조사와

2안

방송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방송정책국	방송기반국
· 방송진흥기획과 · 뉴미디어정책과 · 디지털방송정책과	· 방송정책기획과 · 지상파방송정책과 · 방송지원정책과 · 지역미디어정책과	· 방송기반총괄과 · 방송광고정책과 · 편성평가정책과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방송시장조사와

4. 전문가 조사 결과

'소수안(5안)'에서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 형태

- 거버넌스 현행 유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자는 없었음
 -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 형태로는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관 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과 신설(81.25%)을 "현행 유지(18.75%" 보다 높게 나타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진흥을 위해서는 별도의 과가 필요하기 때문임

1안

현행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과 신설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기획과 · 뉴미디어정책과 ·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기획과 · 뉴미디어정책과 · <u>방송채널진흥과</u> · <u>홈쇼핑정책과</u> · 디지털방송정책과

2안(현행 유지)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기획과 · 뉴미디어정책과 · 디지털방송정책과

1. 문제제기

2. 現 미디어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3. 연구방법

4. 전문가 조사 결과

5. 시사점 및 제언

5. 시사점 및 제언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 필요성

- 다원화된 미디어 거버넌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
- 부처 간 업무 중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복규제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거버넌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융합,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법 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음
- 부처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유기적인 법제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법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음
- 아울러,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서도 거버넌스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음

5. 시사점 및 제언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필요

- 미디어가 갖는 산업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플랫폼 기업들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미디어의 범주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며, 플랫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진흥 관점의 거버넌스 개편 필요
-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중복규제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전문가가 피력한 입장이었음
- 진흥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려움
-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문가가 많았음

5. 시사점 및 제언

콘텐츠 진흥을 위한 조직 개편 필요

- 많은 전문가들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의 주된 이유로 콘텐츠 산업 진흥을 꼽았음
-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 콘텐츠이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 공정위 등 광범위한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실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
- 부분적인 수준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일반PP, 홈쇼핑이 별도의 과로 분리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정책 추진 및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바람직 하다는 것

감 사 합 니 다 .